

“정부·기업 한몸 돼야 전략산업 강력 지원”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제

“반도체 다각도 지원 방안 수립... 배터리 시장 주도권 확보
지난달 고용자수 13개월만 증가세... 지표에 만족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 이후 세계 시장에서 “거센 변화의 파고 이겨내고 기회의 선점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날로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산업을 두고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부처를 향해 “역산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계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김희수 도의원, 청소년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근 김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비가 미뤄지고 본격 시행된 것에 따른 고마움을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공로패로 뜻을 전달한 것이다.

15일 김희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패는 도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준 것에 대한 공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의 미래세대 주역인 도내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인데, 청소년단체에서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소식지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1봄호(제74호)’가 발간됐다.

제74호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기념해 지방의회 역할을 짚어보고,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1952년 초대 지방의회를 구성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됐다가 1991년 부활해 현재 11대 의회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을 점검하는 전문가 기고도 실렸다.

지난 3월 열린 제379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내용도 요약됐다.

제378회 임시회와 제379회 임시회에서 제·개정된 조례와 채택된 건의·결의문도 소개됐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로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노인체육활동 장려·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

최찬욱 도의원,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 10)이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인체육활동 장려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노인체육지도자 육성, 노인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현행 노인체육 진흥은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 조례는 포괄조례의 성격이 지니고 있어 노인 체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체육진흥조례로 포괄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정책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년층만을 타겟팅한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노년층 인구의 체육활동 진흥과 이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9일 개최하는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결실’



도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의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분발인과 대정부상대 건의안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에 정책의 적극 추진을 독려한 결과라 볼 수 있다.

15일 최영심 의원실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도내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최영심 의원이 이와 관련해 정부를 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

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 그리고 행복권 등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된다”면서 생리용품 지원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가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외쳤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이른바 ‘갈창생리대’ 사건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쉽게 사서 쓸 거라 생각했던 생리품을 구하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도내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등을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최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월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 보류 중이지만, 법률안 통과로 인해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민주 원내대표 후보자들, 언론개혁 ‘은도차’

윤호중 “금년 내 처리” vs 박완주 “다음 정부에”

검찰개혁 관련尹 “완수해야”
朴 “시기 정해두면 안돼”



윤호중(오른쪽),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2차 후보 토론회에서 언론개혁·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 과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 윤호중 의원은 금년 내 처리를 강조한 반면 박완주 의원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이 현재 논의 중인 데 아직 본격적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당의 과반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려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게든)”고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은도차를 보였다.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1단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범죄수사 역량의 훼손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에서 추진 지침과 원칙 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 의견을 하고 있다. “당내 토론회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 한다”며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관계자를 모두 국회를 출석시켜 견해를 들겠다. 왜 이게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알이 알려드렸다. 그리고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고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반영해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며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

창업중기·벤처 소득세·법인세 감면 2년 연장

민주 김수홍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이 15일 창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홍 의원실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많은 경우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융통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세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분개도에 오른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홍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후 상당 기간 동안 다각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 활력도 제고되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19~21일 대정부질문 부동산·백신 등 쟁점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사흘간 외교·안보, 부동산,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두고 찬과 방패의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19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박성준·최기상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곽상도·허은아 의원이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은 개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방류, 바이든 행정부 대미관계, 대북관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의 교훈 되새길 것”

민주 전북도당, 세월호 참사 7주기 맞아
“유가족 슬픔 공감·진상규명 노력 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오임선(익산시의회 의원)청년대변인을 통한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하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표명했다.

전북도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덧 7번째 봄이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그날의 아픔이 우리의 가슴에 남긴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생채기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잊혀질 수도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다”며 “우리가 코로나19를 함

께 겪으면서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다시 한번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월호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의 본질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도당은 “세월호의 교훈을 되새겨 전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2일차인 20일에는 경제분야로 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인표·어기주·양향자·이우용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김은혜·김선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인정비율(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된다.

21일 교육·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김승원·서동용·유정주·최혜영 민주당 의원, 유의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4차 대우행에 접어든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 등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은 사흘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이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 총리는 총리 사퇴 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다. /뉴스